거품? 실제? … 안철수 신당 지지율 32%, 새누리당 턱밑 추격

갤럽 조사, 새누리 35%·민주당은 10% 그쳐
내년 지방선거 與·野·安 '삼국지' 구도 가시화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48%로 추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의 3자 구도로 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세를 훌쩍 넘어 새누리당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증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07명을 전화조사해 지난 20일 발표한 12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에 따르면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5%는 새누리당, 32%는 '안철수 신당'을 꼽았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였다.

신당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지지도인 새누리당 41%, 민주당 22%와 대비시켜 볼 때, '안철수 신당'은 새누리당에서 6%포인트의 지지율을 가져왔지만 민주당에서는 현 지지율의 절반이 넘는 12%포인트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안 의원의 4·24 보궐선거 출마선언 직후인 3월 첫째주 23%, 당선 이후인 5월 셋째주 26%, 정책네트워크 '내일' 개소 직후인 6월 넷째주 25%, 독자 정치세력화 선언 직후인 11월 넷째주 26%로 꾸준히 20%대 중반을 유지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추이는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여야 양당 구도가 '3당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파란이 일 가능성을 클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존재는 새누리당에도 위협적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는 더욱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신당'이 호남 몇 곳에서 승리하고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을 제칠 경우 야권의 주도권은 '안철수 신당'으로 쏠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과의 대결구도를 확실히 가져가 존재감 부각에 더욱 집중하면서도 지방선거에서 개혁공천의 바람 만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고 그 지지율 때문에 '안철수 신당' 후보들이 줄줄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안 의원 개인 지지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떻든 지방선거 후 정치지형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신당'까지 선거 결과에 따라 당 내외 권력지형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 여권도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48%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국갤럽 조사로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응답자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41%였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 '새정추'

여의도에 둥지 틀고 호남에서 민심 몰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여의도에 둥지를 트고 오는 26일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세 번째 지역 설명회를 열고 호남지역 민심 몰이에 다시 나선다.

새정추 관계자는 22일 "내일(23일) 국회 앞 여의도 신동해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새로 입주한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추는 11층 전체 661㎡(약 200평) 중 200여㎡(약 60평)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해빌딩은 민주당 당사가 입주한 대산빌딩의 바로 옆 블록에 있다. 민주당 당사가 새누리당이 입주해 있는 한양빌딩과 마주 보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 당사와 '새정추'의 사무실이 반경 50m 안에 모두 자리 잡아 '이웃사촌'이 된 셈이다.

새정추는 이어 '안철수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광주를 방문, 호남 공략을 본격화한다. 광주 방문은 신당 설명회 차원이지만 앞서 대전·부산 설명회와는 상징성과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면서 전통적으로 야당 표심의 향배를 좌우해온 지역이었다. 지난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노풍(盧風)'의 진원지가 광주였고, 지난 대선 당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세력을 키운 곳도 광주였다.

새정추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광주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민주, 계파갈등 내우에 安風 외환 … '설상가상'

安신당 '새정추' 26일 광주설명회에 전전긍긍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의원의 이른 대선 행보로 인한 계파갈등 조짐이라는 내우(內憂)에,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라는 외환(外患)까지 겹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우선 손학규 상임고문까지 비판 대열에 직접 가세,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간 전선이 첨예해지면서 내홍 조짐이 격화되고 있지만 문 의원은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당내 비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손 고문은 지난 21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행사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추락한 이유는 딴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 히스테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내 집단을 위한, 아주 고착된 이기주의에 매몰돼 야당이나 민주당,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든 이러는(행동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과 친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의원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떡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민주당 신학용 의원), "지금은 차기대선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는 등 발언 외에도 "다수 국민은 (문 의원 행보를) 의아해 한다"며 한때 문 의원을 지지했던 '국민동행'의 김덕룡 공동대표까지 가세하면서 확산하는 조짐이다.

그럼에도, 문 의원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던 코엑스에서의 대선 회고록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 이어 18일엔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고 19일엔 윤봉길 의사 묘소를 참배했다. 오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갖는데 이어 새해 들어 전국 순회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엔 오는 26일 예정된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광주 설명회라는 근심거리가 있다. 지난 17일 대전을 시작으로 신당 알리기 작업에 착수한 안 의원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호남 전체의 민심 이동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급상승 곡선을 타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풍의 진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방'을 내줄지도 모르는 난처한 처지에 빠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특별한 이벤트보다 당장 국회 국정원특위나 정치개혁특위, 특검 도입 등에서 성과를 내면서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재정 수반 정책 단체장 합의 얻어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가업무를 하는데 지방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때 단체장의 합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위원장은 광주시청에서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운태 시장이 최근 지방재정 위기를 거론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협력적 기능이 있었다면 최근 재정배분 문제(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조정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적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또 시·군·구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통합 효율성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